
 <b>국토교통부</b>	<b>보 도 자 료</b>		
	<b>배포일시</b>	<b>2021. 9. 1.(수)</b> <b>총 4매(본문4)</b>	
<b>담당 부서</b>	주거복지정책과	<b>담당자</b>	·과장 김명준, 사무관 조은혜, 김선영 ·☎ (044) 201-4504, 4506, 3360
	공공주택정책과	<b>담당자</b>	·과장 성호철, 사무관 홍일산 ·☎ (044) 201-4539, 4514
<b>보 도 일 시</b>		2021년 9월 2일(목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9. 1.(수) 11:00 이후 보도 가능	

## 공공임대주택 재고율 8% 수준(누적 170만호, OECD 평균 달성, OECD 10위권, '2022년에는 200만호 재고 달성 전망

- 주거수준 상향을 위한 통합공공임대주택 1.8조원 포함,  
 '22년 공공임대주택 예산 22.8조원 정부안 통과 -

□ 국토교통부(장관 노형욱)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'주거복지로드맵('17.11월)'을 발표한 이후,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대 공급한 결과 10년 이상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재고는 약 170만호, 재고율\*은 8% 수준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.

\* 공공임대주택 재고율: 국내 총 주택수에서 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로, 국가의 주거안전망 지원 수준을 가늠하기 위한 대표적인 정책적 지표

○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'18년부터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꾸준히 확대해왔으며, 내년에도 공공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'22년도 공공임대주택 예산 22.8조원을 정부안으로 확정하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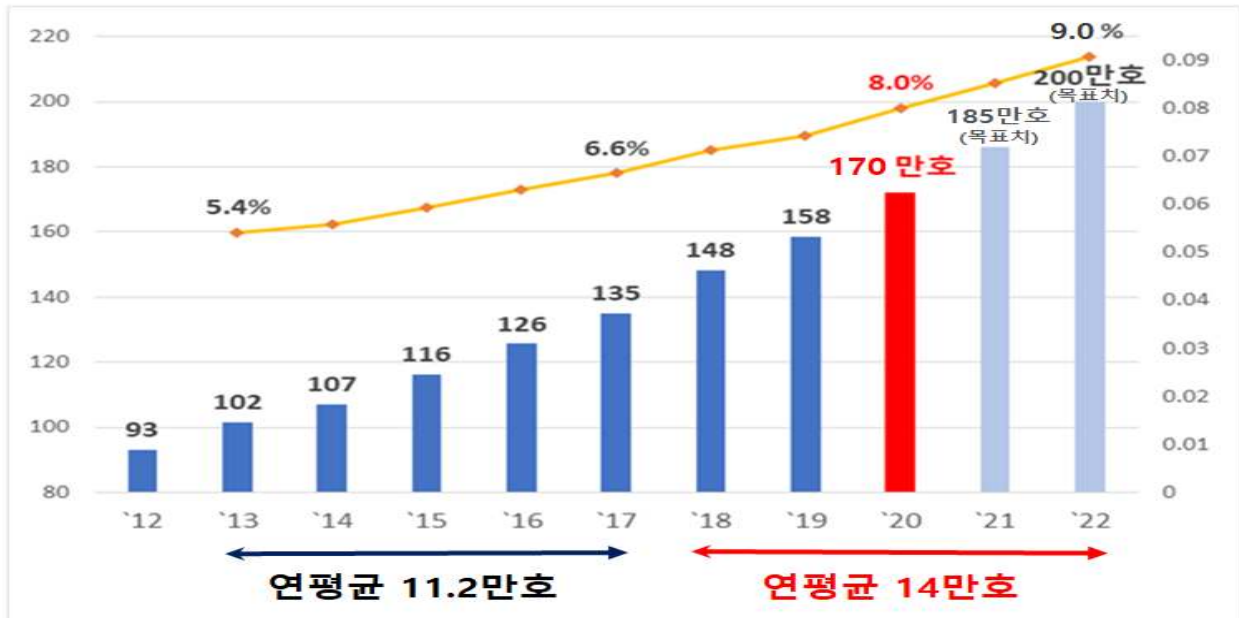
< 연도별 공공임대주택 예산 현황('17~'22., 단위: 억원) >

	'17	'18	'19	'20	'21	'22(정부안)
예산규모	87,638	124,965	142,902	160,493	196,074	227,613

○ 이는 '17년 정부출범 초기 대비 약 160% 수준 증가한 수치로, 같은 기간 재고량은 135만호에서 170만호로 26%증가하여 무주택 임차 가구 731만 가구의 20% 이상을 포용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다.

\* 역대 연평균 공급물량 : ('08~'12) 9.1만호, ('13~'17) 11.2만호, ('18~'20) 14만호

<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 추이 >



○ '21년 OECD가 공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공임대 주택 재고율은 10위권 수준으로 OECD 국가들 간 상이한 산정 기준을 감안\*할 경우에도 임대주택 공급 수준이 상위권에 진입한 것으로 해석된다.

\* 공공임대주택 범위(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주택 외에 비영리 주택협회가 공급하는 주택 등 포함여부), 총 주택 수 산정기준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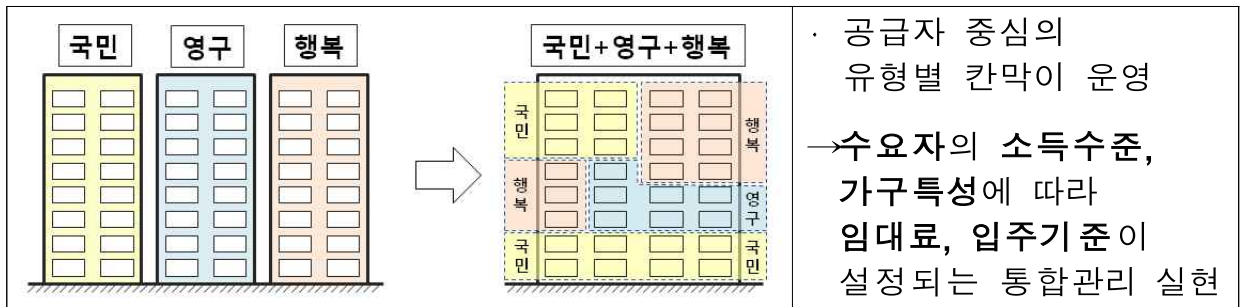
< OECD 국가별 공공임대주택 재고율 순위 >

	1	2	3	4	5	6	7	8	9	10
2019년 발표	네덜란드	덴마크	오스트리아	영국	프랑스	아일랜드	아이슬란드	핀란드	폴란드	대한민국
2021년 발표	네덜란드	오스트리아	덴마크	영국	프랑스	아일랜드	아이슬란드	핀란드	대한민국	스위스

\* (출처) OECD Affordable Housing Database, '21.7.12 자료 및 '19.12.16 자료 <http://www.oecd.org/housing/data/affordable-housing-database/housing-policies.htm>

□ 한편, 정부는 그동안 양적 성과를 넘어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주거공간이 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의 운영방안과 주거품질을 혁신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.

○ '22년부터 영구임대('89년 도입), 국민임대('98년 도입), 행복주택('13년 도입) 등 복잡한 유형이 하나로 통합된 '통합공공임대주택'이 전면 도입(사업승인)되며 다양한 측면에서 주거수준이 개선될 계획이다.



① 다양한 계층이 더욱 쉽게 임대주택 이용이 가능해진다.

- 입주대상이 현재 기준 중위소득 130%에서 150%(맞벌이 180%)\*까지 확대되고,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입주자의 소득에 따라 달리 부과한다.

\* '22년 맞벌이 4인 가구 기준, 월소득 922만원(연소득 1.1억원) 이하

< 통합공공임대주택 소득연계 임대료 부과 기준 >

기준 중위소득	0~30%	30~50%	50~70%	70~100%	100~130%	130~150%
시세대비 임대료율	35%	40%	50%	65%	80%	90%

② 더 넓고 쾌적한 주택이 공급된다.

- 3~4인 가구가 선호하는 중형주택(전용 60~85㎡)을 도입\*하고, 주요 마감재(도어락, 바닥재 등) 품질을 분양주택 수준으로 제고한다.

\* '21년 1천호 → '22년 6천호 → '23년 1만호 → '24년 1.5만호 → '25년 이후 연 2만호

③ 다양한 사회서비스도 함께 누릴 수 있다.

- 단지 내에 지역여건에 맞는 국공립어린이집, 생활문화센터 등 생활 SOC를 설치하여, 건강·복지·창업지원 등의 다양한 사회서비스도 같이 공급되는 '살고 싶은 임대주택'으로 공급될 예정이다.

- 정부는 ‘통합공공임대주택’의 내년 본격 도입에 앞서 현재 시범단지 2곳\*을 추진 중이며, 통합공공임대주택을 위한 예산으로만 ‘22년 1.8조원을 반영하였다.

\* 과천 지식정보타운 605호, 남양주 별내 576호

- 국토교통부 김홍목 주거복지정책관은 “무주택 서민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늘려 ‘22년까지 재고를 200만호로 확충하여 OECD 상위권 수준의 주거안전망을 공고히 하는 한편,
- 다양한 평형도입과 입주자격 확대,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과 같이 혁신적인 수준의 개선을 통해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함께 어울려 사는 새로운 주거문화를 공공임대주택이 선도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”라고 말했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조은혜 사무관(☎ 044-201-4506) 또는 홍일산 사무관(☎ 044-201-4514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